

“역사적 아픔 묻히지 않도록 5·18 진실 규명 서둘러야”

12·12쿠데타와 5·18 유혈진압 책임자 노태우 사망...지역민 반응

노씨 아들 대리사죄 했지만 고백·기록물 없이 숨겨 안타깝고 허탈
관련자들 진상 규명 조사 협조 촉구...국가장·국립묘지 안장 반대
오월단체 “노쇠한전두환 건강 감안 조속한 사과·진실 밝히기 시급”

전두환(90)씨와 함께 12·12쿠데타와 5·18 유혈진압의 핵심 책임자로 꼽히는 노태우(89)씨가 사망했다.

노씨가 국민들 바람과 요구에도 끝내 5·18에 대한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사망하면서 더이상 역사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진 전씨의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원에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노태우와 5·18=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이었던 노태우는 육군 사관학교 11기로 입관해 전두환·정호용씨 등과 함께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에 관여하면서 신군부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노씨는 12·12 이튿날 9사단장에서 수도경비사령관에 임명됐다.

국방부가 지난 2007년 펴낸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에는 노씨가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던 1980년 5월 21일 유혈진압에 관여한 정황이 나온다.

2군사령부가 작성한 ‘광주군 총정작전군 지시 및 조치사항’과 1995년 검찰조사 때 전두환 신문조서에 따르면 5월21일 새벽 4시30분께 국방부 장관실에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진중재 2군사령관, 노태우 수사사령관, 정호용 특전사

령관, 차규현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계엄군의 광주 외곽 배치 ▲자위권 발동 ▲1개 연대의 추가 투입 ▲전투력 공백 보전책으로 2개 훈련단 훈련동원 소집 ▲폭도 소탕작전은 5월23일 이후에 의병 실시 ▲경계 강화조치 등이 논의된다.

당시 문서에는 “장관 주영복, 총장 이희성, 사령관 진중재, 수사본부장 노태우, 특전사령관 정호용, 합동 수사본부장 전두환·전 각하(전두환) : 초병에게 난동 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적혔다. 자위권 발동은 군인이 생명을 위협받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후 노씨는 전두환의 후계자로서 대통령까지 올랐다. 노씨가 대통령 퇴임 후 2년8개월 만에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고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 진압, 대통령 비자금 등으로 1997년 4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12월18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전두환씨와 함께 석방됐다. 노씨는 생전 광주학살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노씨는 지난 2011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사태의 진범은 유언비어라며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들은 시민들이 무기고기를 슬쩍한 것”이라고 주장해 지역민의 공분을 샀었다.

최근 노씨의 장남인 노재현(54)씨가 광주를 방문해 노씨의 이름으로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지만, 회고록 수정 등 구체적인 사죄의 행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끝내 사과·반성 없이...=오월단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5·18의 진실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월 단체(5·18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살아남은 자들은 진상규명 조사가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노씨에 대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조오섭, 윤영덕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죽더라도 5·18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노씨는 아들을 통해 대리사죄 등 용서를 구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본인의 사죄는 물론 진상규명 관련 고백과 기록물 공개, 왜곡·조작된 회고록을 교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백이나 기록물들을 내놓지 못하고 노씨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유족회장은 “국민을 살인한 대통령으로 내란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된다”면서 “헌정을 유린한 노씨가 죽어서도 대통령 예우를 누린다면 오월단체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또 부처 노쇠해진 전두환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 조속한 사과와 반성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기우식 참여자치 사무처장은 “노태우씨는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 앞에 죄를 지었다”면서 “책임이 더 큰 전씨는 지금이라도



1996년 8월 5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사과를 하고, 전씨에 대한 재판도 신속히 끝내 진실을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씨와 전씨 등 35명을 ‘5·18 가해 책임자’로 직접 조사를 추진했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핵심 조사 대상자가 사라지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조사위는 “향후 5·18 진상규명 관련 핵심인물 35명과 관련자에 대해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판서 드러난 비위경찰의 민낯

허위자백 강요하고 압수수색 예정일 알려주고...재발 방지 절실

경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도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반말, 비속어로 모욕감을 주는가 하면, 압수수색 예정일을 알려주고 정작 압수수색은 제대로 하지 않고...’

오래 전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위 경찰의 위법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춰 수사·사건 정보를 흘려주는 경찰의 민낯이 고스란히 공개됐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 등 4명에 대해 경찰의 허위자

백 강요 등으로 인한 신문조서 작성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 등을 내 1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담당한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은 자백을 강요하고 “가족 회사까지 씩 털어 버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진정을 받고 지난해 5월 일부 위반사항 등을 들어 직무교육 실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담당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자백 강요와 부적절한 언행 등에 따른 인격

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박 부장판사는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부인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알선한 경찰에 대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50) 경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사 사무장을 했던 C(55·변호사법 위반)씨도 함께 법정에서 싸웠다.

A 경위는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는가 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시기를 대상 업체측에 미리 알려주고 정작 압수수색나가서는 할 게 없다며 집행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이다. 전남경찰청 소속 B 경위도 사건 처리를 부탁받고 정보를 알려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영옥 전 단장 첫 재판...혐의 일부 부인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 FC 단장)씨가 법정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기씨는 2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 일부 세부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아들 기성용과 광주시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농지법 위반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 부정발급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이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명의자의) 명사·목시적 승낙이 있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자칫 명의자인 기성용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알고 문서를 작성할 때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승낙이 있었다고 한다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 허락한 게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불법을 위임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씨측은 이와관련, 다시 검토해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농지 불법 전용 혐의에 대해서도 농지가 아닌 잡종지만 임대했는데 건설기계임대업자인 A씨가 전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1일 중인 신문을 거쳐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